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형, 유통과 대응 방안

양무진**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과 유통과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시기는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 시기이다. 연구 방법은 언론보도 등 문헌 분석에 집중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은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최고지도자 측근 숙청형, 기타형 등 네 가지이며, 유통과정은 생산, 유포, 재생산, 가짜 확인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의 심리에 기인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도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메커니즘이 있다. 가짜뉴스가 국가안보나 경제, 사회 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그 피해는 무차별적이다. 미국의 CNN이 ‘김정은 위중’을 보도했을 당시 주가는 한때 2.99%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9.2원 급등했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가짜뉴스 미디어의 삼진아웃제와 시민단체와 언핵이 함께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인과 전문가가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확산을 막아야 할 주체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 혹은 ‘법률안’ 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북한, 가짜뉴스, 유형, 『조선일보』, CNN, 정부, 대응, 역할

* 본 연구는 2020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서론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뉴스의 전달이 인터넷·스마트폰·유튜브 등 온라인에 집중됨으로써 뉴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증가하였다.¹⁾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가짜뉴스의 피해는 점증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카더라’ 하는 루머는 ‘아니면 말고’로 이어져 왔다. ‘카더라’라는 루머에 상처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도 있다.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인포데믹(infodemic)이라 한다. 정보전염병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칠 때 유무형의 피해는 무차별적이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탈(脫)진실(post truth)의 시대가 도래했다.²⁾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Big Brother)³⁾와 같은 세력이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한 가짜뉴스로 판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가짜뉴스로 판별되었음에도 믿지 않고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기대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1) 노성중·최지향·민영, “가짜뉴스효과’의 조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가짜뉴스효과’의 견인 및 견제 요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4권 4호 (2017), 102쪽.

2) 2016년 11월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 truth)을 뽑았다. 리 매킨타이어(Lee MacIntyre), 『Post-truth』, 김재경 옮김(서울: 두리반, 2019), 15쪽.

3)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84』, 정희성 옮김(서울: 민음사, 2003).

믿는 확증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⁴⁾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음으로써 신변이상설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직접 ‘김 위원장은 건강하다’는 것을 해명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뉴스가 게시될 때마다 ‘특이 동향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은 멈추지 않았다. 해명 와중에 공개해서는 안 될 기술적 전략자산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었다. 전략자산 암시는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북한으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과 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시기는 2012년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연구 방법은 언론보도 등 문헌 분석에 집중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재생산은 언론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언론보도 중심의 문헌 분석이 현실성과 적실성을 지닌다.

2. 가짜뉴스 4대 유형

2020년 5월 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이 북한 언론을 통해 확인됨으로써 20일 동안의 가짜뉴스는 하나의 설로서 막을 내렸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폐쇄국가인 북한 내부의 이런저

4) D. Spohr, "Fake new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Filter bubbles and selective exposure on social media," *Business Information Review*, Vol.34, No.3(2017), pp.150~160.

런 일들은 늘 전 세계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성찰보다 북한의 폐쇄성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유형은 ①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②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③ 최고지도자 측근(당·정·군 관료) 숙청형, ④ 기타형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최고지도자의 신변과 관련된 것은 파급력이 있고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림 1>과 같이 1986년 11월 17일 자 『조선일보』는 일본 동경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일성이 군부불만세력에 의해 저격당했다’는 김일성 피격설을 호외로 보도했다. 중국 북경 외교가에서는 김정일도 실각했다는 뉴스가 전파되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김일성이 몽골 국가원수를 영접했다는 보도가 『로동신문』에 게재됨으로써 김일성 피격설은 오보로 판명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서울특파원으로 일했던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2008년 8월 『김정일의 정체』라는 저서를 발간해 ‘김정일이 2003년에

<그림 1> 『조선일보』 호외 김일성 피격설



자료: “김일성 총 맞아 피살,” 『조선일보』, 1986년 11월 17일.

<그림 2> 김정은 심혈관 시술설

DAILY NK | 지금 북한은 ~ 뉴스 | 기획 | 모더니즘 | 국제기사 | ENGLISH | 후원하기
 김정은, 최근 심혈관 시술 받았다...여전히 특각서 치료 중
 소식을 옮긴다면, 국외가 직접적 원인 - 평양서 발기해 1호, 저당 등 지병도 포함*
 * 2020.04.20 10:08 0:00



자료: “김정은, 최근 심혈관 받았다.” 『데일리NK』, 2020년 4월 20일.

이미 사망했고 그의 대역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인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⁵⁾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3년이 아니라 2011년 12월에 사망하였다. 2020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은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그가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림 2>와 같이 국내 대북 관련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받고 특각에서 치료 중’이라고 최초 보도하였다.

보도 다음 날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세계적인 언론매체인 CNN이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하여 ‘김 위원장 위중설’을 보도하자 김정은 신변이상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

일본 언론들도 소식통을 인용해 ‘작년 말부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여정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신변이상설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과 관련된 뉴스는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

5) 重村智計, 『金正日の正体』(東京: 講談社, 2008).

<그림 3> CNN 김정은 건강이상설
보도 1



<그림 4> CNN 김정은 건강이상설
보도 2



자료: “U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n leader is in Grave Danger After Surgery,” CNN, 2020년 4월 20일.

2)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대표적인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당 경공업 부장의 독살설이다. <그림 5>, <그림 6>과 같이 미국 CNN은 2015년 5월,

<그림 5> CNN 김경희 독살 관련 고
위 탈북민 인터뷰 보도 1



<그림 6> CNN 김경희 독살 관련 고
위 탈북민 인터뷰 보도 2



자료: “North Korean leader ordered aunt to be poisoned, defector says,” CNN, 2015년 5월 11일.

<그림 7> TV조선 김경희 독살 보도 1



자료: “미 CNN “김경희, 김정은 지시로 독살 당해.” TV조선, 2015년 5월 12일.

<그림 8> TV조선 김경희 독살 보도 2



자료: “김정은, 고모 김경희 독살,” TV조선, 2015년 5월 12일.

북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장성택 처형 이후 고모 김경희를 독살했다고 보도했다. <그림 7>, <그림 8>과 같이 국내 종편은 김경희 독살설을 확산시켰다. 김경희는 2013년 남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처형 전후로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설 명절 기념공연에 참석,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같이 공연을 관람 하면서 6년 반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독살설은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었다.

3) 최고지도자 측근(당·정·군 관료) 숙청형

대표적인 것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숙청설이다. <그림 9>, <그림 10>과 같이 『조선일보』는 2019년 5월 김영철 노역형 등 숙청을 보도하였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미협상을 주도해 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그 책임을 물어 노역형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국내 다수 언론이 이를 인용하고,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미국 관리들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⁶⁾고 보도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보도 이후 4일 만에 김영철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되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역시 과거 총살되었다고 보도⁷⁾된 바 있다. <그림 11>과 같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

6) “North Korean Negotiator’s Downfall Was Sealed When Trump-Kim Summit Collapsed,” *The New York Times*, 3 May, 2019.

7)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조선일보』, 2013.8.29.

<그림 9> 조선일보 김영철 노역형 보도 1

朝鮮日報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은 총살”

북한이 9월 27일 조선인민군을 10만 명 이상 동원한 강행군을 개시했다. 대북 소식통 “북한 하노이 경협에 대해 정상 실무팀 집단숙박” 노동신문 “반당·반혁명 관료인 심판—공상에 처할 주 및 언급” “김영철이 근산이란 전역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혁철은 국경선을 넘고 북으로 들어갈 때 당에서 배는 그를 끌고 가는 명사(명사)는”

<그림 10> 조선일보 김영철 노역형 보도 2

“하노이 실무협상 김성해, 통역 신혜영 둘 다 정치범 수용소행”

北, 하노이 노역 수용소

북한은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평양에서 대북 소식통을 통해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이라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하노이 실무협상 대표로, 김혁철은 통역관으로 알려졌다. 김성해와 신혜영은 하노이 실무협상 대표로 알려졌다. 김성해는 김영철의 통역관으로, 신혜영은 김영철의 통역관으로 알려졌다. 김성해와 신혜영은 하노이 실무협상 대표로 알려졌다. 김성해는 김영철의 통역관으로, 신혜영은 김영철의 통역관으로 알려졌다.



자료: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조선일보』, 2019년 5월 31일.

<그림 11> 『조선일보』 현송월 총살 보도

가수·무용수 등 유명 예술인, 섹스관계 정면 촬영·판매·시청
北, 은하수·광재선 억단 해체



자료: “김정은 옛 애인(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조선일보』, 2013년 8월 29일.

을 포함하여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였으며 극히 자극적이었다.

4) 기타형

기타형은 인물의 신변이상설 못지않게 의도적인 기사를 보도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거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가짜뉴스들이다. 북한붕괴론이 강했던 1990년대 말 『뉴욕타임스』는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핵시설을 몰래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⁸⁾ 미국 정부는 북한에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핵개발 시설과는 무관하다며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사찰단 파견을 위한 4차례의 회담 이후 1999년 5월, 미국 사찰단이 금창리 현지 조사를 했지만 핵시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금창리 방문 및 확인을 위해 북한에 대북지원을 약속하는 등 언론사의 보도가 국가 간의 관계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가짜뉴스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하기 위해 생산되는 등 그 목적이 다양하다. 2019년 5월 『동아일보』는 정부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지급 시 달러 대신 쌀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북한에 수차례 제안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⁹⁾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근거 없이 보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를 뒤덮은 올해 2월 29일 ‘김홍광 유튜브’에서는 국산 마스크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¹⁰⁾ 또한 3월 3일 일부

8) "North Korea Site an A-Bomb Plant, U.S. Agencies Say," *The New York Times*, 17 August, 1998.

9) "북 "쌀보다 현금" 금강산-개성공단 대금 쌀로 2배 지급 거부," 『동아일보』, 2019년 5월 27일.

10) "웬일이야? 코로나 마스크 남에선 동나고 북에선 넘쳐나???", '김홍광유튜브', 2020년 2월 28일.

미디어는 북한 의료진이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영상을 두고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북한에 퍼 줬다고 보도하였다.¹¹⁾ 정부는 ‘우리 마스크를 북한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탈북자가 대표로 있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출처 불명의 북측 소식통을 인용하여 2019년 11월 강제 복송된 살인자 선원들이 선원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하였다.¹²⁾ 국회 상임위 등에서 정부가 선원들의 귀순 의사 등 합동신문 결과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동 기사를 확대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일부 탈북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강제복송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2017년 11월 『조선일보』는 탈북민 단체인 (사)샌드연구소의 주장 등을 종합해 북한 핵실험으로 탈북민들이 피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¹³⁾ 2019년 10월 국감을 앞두고는 일부 언론이 통일부 피폭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소견서를 공개하면서 오보 정정 요청 등을 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였다. 기타형 가운데, 김홍광 유튜브브,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사)샌드연구소 등의 세 가지 사례 모두 오보 생산에 있어 탈북자 단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1) “한국산 마스크 북한에 간다!!!,” 『신의한수』, 2020년 3월 3일.

12) 가짜뉴스로 판명되면서 2020년 2월 18일 정정보도문을 게시한다. “강제 복송된 북한선원 2명 살인사건과 무관, 북한 주민 16명 탈북 시키려던 탈북 앞선책으로 밝혀져,”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19년 12월 17일.

13) “북 죽음의 땅, 풍계리... 향문 없는 기형아 낳고 나무도 안 자라,” 『조선일보』, 2017년 11월 6일.

3. 4단계 유통과정

1) 대북(내부) 소식통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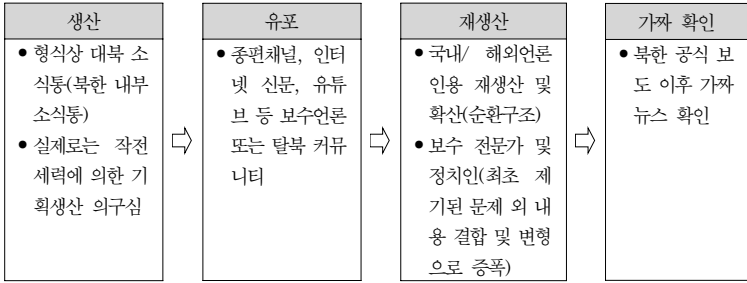
북한은 개방적인 국가가 아니다. 폐쇄적인 사회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성이 상당 부분 제약된다. 정보의 생산과 전달체계가 제공자의 유일한 제보에 따라 생산되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 제공자는 북한 내부 소식을 외부세계에 전하는 역할을 하며 이른바 ‘내부 소식통’으로 불리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여러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성되는 데 ① 탈북자 및 탈북자와 연계된 북한 주민, ② 북한과 중국 접경을 오고 가는 국내외 무역업자, ③ 접경지역에서 비교적 북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인과 조선족, ④ 북한 방문 외국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북중 간 국경을 오고 가고 있으며 북한 관련 특문한 사항들을 외부에 알리게 된다. 특문 사항들이 기사화 될 경우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들이 상업적 수단이나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 북한 내부 정보가 얻기 어려운 고급 정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보 획득에 보상과 이권이 더해지면 가짜뉴스 생산의 유혹이 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내부 소식통의 주요 구성원으로 탈북자 혹은 탈북자 단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 4단계 유통과정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특정 첩보·정보 등이 생성·접수되면 이를 언

<표 1> 가짜뉴스의 4단계 유통과정



자료: 필자 작성.

론사가 뉴스로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공된 뉴스는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타 언론 매체가 이를 확산시킨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나 첩보들이 더해져서 뉴스가 재생산되면서 최초 제기된 사안들이 변형되고 증폭되는 과정을 거친다.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추후 검증과정을 통해 오보임이 확인되면 그동안 확대·재생산된 모든 뉴스들이 가짜뉴스로 판명되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첩보와 지라시가 생산·유포되고 있으며 지라시는 지라시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용은 지라시인데 포장은 언론사의 기사형태라는 점에서 가짜뉴스는 그 파급력을 발휘하게 된다. 초고도 정보화 시대에 각종 미디어 환경이 분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편채널, 인터넷 신문 등 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언론사가 많다 보니 언론사들 간 북한 섹션을 따로 두거나 북한 관련 전문기자들을 채용하는 등 언론사 간의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제 북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가짜임이 확인이 될 경우 정보원으로서의 신뢰성과 함께 정보장사 시장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확하고 확인 불가능한 약간의 정보 소스가 의도를 가진 언론사에서 가짜뉴스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그 과정의 배경에는 언론사 간의 특종 및 전문성 경쟁이 주요한 원인이다. 일부 언론사들은 탈북자 출신 기자들을 채용하고 북한 정보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특종 혹은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다.

미국 등 해외 유력 언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유력한 방송인 CNN 등과 같은 경우는 속보(Breaking News)로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언론사 역시 기사의 파급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속보 경쟁에 따라 검증과정도 없이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다. 김경희 독살설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도 CNN의 보도가 기폭제 역할을 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보도에 어떤 정치성이 내재된 경우 가짜뉴스로 둔갑시키는 확률이 더 높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¹⁴⁾ 북한 관련 오보의 많은 부분이 『조선일보』 등 특정 보수 신문사에서 나왔다. 이 언론사들의 경우 이른바 ‘진보정권’이 집권하여 화해협력정책을 펼치는 경우 이를 폄훼하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측면도 있다. 가짜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안보불안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14) 정치적 의도뿐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이윤획득을 위해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대북 정보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 의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고려하지 않는 행태는 바람직한 언론사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표 1>과 같이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행위자들이 있다. 전문가나 정치인들이다. 전문가나 정치인들은 최초 정보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짜뉴스의 재생산에 동력을 불어 넣기도 한다.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 보도에 있어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최초 생산과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모두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¹⁵⁾ 이들의 문제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고 정부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무책임한 뉴스 재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은 기사 작성 시 이른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인용을 자주 활용한다. 이유는 이들의 언급이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체에 자주 출현하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비교적 정보 소스가 많고 매체의 신임도도 높다. 이들이 언론보도에 정확한 분석을 가미해주는 것은 올바른 뉴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이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뒷받침하는 순간 가짜뉴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들이나 오히려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남북관계가 정체된 시기이다. 남북관계가 활발하던 시기에는 직접 만남의 기회 등이 많기 때문에 오보

15) 보수 전문가 정성장 박사가 보수 언론에 김 위원장 신변이상설 제기(4.17.) → 윤상현 국회 외통위 위원장 ‘평양 완전봉쇄, 신변이상’ (4.21.) → NSC 상임위 “특이동향 없음” 발표(4.23.) → 윤상현 위원장 신변이상설 지속 제기(4.27.) → 국회 외통위 통일부장관 “특이동향 없음” 재확인(4.28.) → 국회 탈북 당선인 태영호·지성호 등이 사망설·후계설 지속 제기(4.30.).

가 생길 여지가 줄어들다. 남북관계의 정체기에는 북한 정보 유입이 제한적이며 우리 언론매체도 북한 관련 기사를 취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비교적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의 틀을 갖춘 탈북자 및 탈북자단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들은 대북(내부) 소식통과 연결되어 있는데 검증이 어려운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는 탈북자(혹은 단체)와 내부 소식통 간의 정보·첩보 유통은 더욱 활발해진다.

3) 정부발 가짜뉴스 사례

전 세계 수많은 가짜뉴스 생산과정에서 정부가 언론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시키는 사례는 분명 존재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우리 사회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사건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탄압했던 사례가 있다. 예측컨대 보다 덜 민주화된 사회나 국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정언유착’에 따라 가짜뉴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탈북자 등 민간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북한 민주화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 자금들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며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이른바 대북 소식통의 전주 역할을 하면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 폭로하는 주요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¹⁶⁾

16) “각국 정보기관들이 고급 탈북취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전 속에서 탈북자들의 정보장사를 하고 있으며 ‘북한 정보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운동, 북한민주화운동을 겸하고 있으며 아예 공개적으로 정보장사를 진행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CNN 등 미국 언론들의 오보의 배경에는 미국 군부와 군산복합체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일본의 일부 언론은 극우적·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치세력과 커넥션이 있다. 일본의 안보적 문제와 연결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 북한 이슈를 활용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역대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펼쳐 온 군사정권 또는 보수정권도 가짜뉴스 소스 제공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1986년 11월 김일성 피격설 당시 이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김일성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휴전선 전파방송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¹⁸⁾ 당시 정권은 10.28 건국대항쟁 직후였고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주화운동이 불붙기 시작한 때였다.¹⁹⁾ 국방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당일 통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이영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처형’ 문건을 배포했다.

이영길은 석 달 뒤 노동당 7차 회의에서 생존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입수한 정보를 증계해서 판매를 대신해 주는 분업이 생기고 있다.” “북한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1일.

17)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는 시점에 1998년 8월 금창리 핵시설 보도가 나왔다. … 예산편성도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미국 군산복합체가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의도적 긴장조성 의도가 있었다.” CNN의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 제기는 반트럼프 정서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2020년 4월 23일.

18) “평양 보도기관 침묵 야군 경계태세 만전,” 『조선일보』, 1986년 11월 17일.

19)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학생운동 1980: 10·28 건대항쟁을 중심으로』(과주: 오월의봄, 2016), 16쪽.

정부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언론에 직접 흘린 것은 몇 시간 전에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쏠릴 비판적 시선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²⁰⁾ 2016년 8월,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귀순에 대해 ‘북한 엘리트 계층의 와해’, ‘김정은 정권의 몰락’ 등의 기사가 쏟아졌으나 이를 부추긴 것이 정부라는 의혹이 추후 제기된 바 있다.

4. 가짜뉴스에 대한 반응과 손실

1) 일반 국민의 반응

보통 가짜뉴스의 생산·소비는 사람의 심리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철저히 타산적이고 방어적이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학적이고 몰이해적인 태도를 보인다. 연예계 지라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공격을 당하는 사람(연예인 등)들을 동정하기보다는 동조하는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편견 없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가짜뉴스의 생산자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든다. 설사 그것이 거짓된 정보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퍼뜨려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 역시 같은 메커니즘을 가진다.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이 퍼져 나왔을 때 댓글을 보면 이러한 심리가 극명하게

20) “정체불명 소식통·두들기는 언론 ‘코리아리스크’ 키웠다,” 『한겨레』, 2020년 5월 4일.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것’,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김정은 사망을 바라거나 환호하는 듯한 댓글도 많이 있다. 이러한 댓글자들은 김정은이 사망했으면 하는 자신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뉴스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믿고 싶은 심리를 스스로 합리화한다.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의 유통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안보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런 기본 심리 때문에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가짜뉴스 생산 커넥션이 사라질 수는 없다. 다만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개별적인 행동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넘어 국가의 안보나 국민 안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 유통에 있어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2) 북한의 반응

북한 고위층의 신변이상 등 가짜뉴스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한 사례는 거의 없다. 추후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가짜뉴스로서 판명된다.²¹⁾ 김일성 피살설과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 등 국내외 언론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북한 공식매체가 이에 대해 직접 반응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외국 원수에 대한 축전 발송, 서신·선물 전달 등 국가원수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동정만 보도한다.

21) △ 김일성 피격사망설(1986.11.) 보도 이후 북한은 별도 부인 없이 2일 만에 공개 활동(몽골 국가원수 영접)을 통해 사실 확인, △ 김경희는 독살설 보도(2015.11.) 이후 5년여 만에 올해 초 공개 활동으로 등장, △ 김영철은 숙청설(2019.5.) 4일 만에 모습 공개 등.

북한의 공식 반응이 없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에 기인한다. 최고지도자의 관련 사항은 극도의 보안 사항이다. 최고지도자 신변이상설이 우리 국내에서 퍼졌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지만 북한 주민들의 귀에 들어가면 동요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북한 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미디어 환경의 차이도 있다. 개방화된 국가에서는 언론사 간 경쟁구조에 따라 상호 간에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나 국영매체만 존재하는 북한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폐쇄국가의 특성상 가짜뉴스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숨겨야 할 정보가 공개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짜뉴스에 대해 북한 당국이나 매체가 적극적·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가짜뉴스는 다른 가짜뉴스보다는 검증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3) 국가적 손실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나 증권가 지라시로 인해 악성댓글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무심코 유포시키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국가의 안보나 경제, 사회 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의 경우 CNN의 ‘김정은 위중 보도’(2020.4.21.)로 당일 주가는 장중 한때 2.99%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9.2원이 급등하였다고 한다.²²⁾ 이러

한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초래될 뿐 아니라 안보불안 야기나 남남갈등과 같은 무형의 심리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의 경우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안보협의체 논의를 통해 ‘특이동향이 없다’라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되어야 할 정부의 정보 전략자산들도 은연중에 공개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북한 관련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에도 심각한 장애를 제공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현 정부의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에도 위배된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코리아 리스크 심화로 불필요한 안보비용을 강요하고 대외 국가신뢰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²³⁾

만약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뉴스 확산 환경을 역이용하여 북한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일부러 가짜뉴스를 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시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안보불감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인 손실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 관련 보도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2) “주가 폭락에 원/달러 환율 20원 급등… 1,266원 마감,” 연합뉴스, 2020년 3월 23일.

23) 김동엽, “북한 허위정보의 안보문제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허위 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서울: 늘봄플러스, 2020), 56~60쪽.

5. 가짜뉴스 대응 방안

1) 가짜뉴스 분별 자세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가짜뉴스들은 생명력이 길지 않다.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네티즌 수사대, 연관검색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금방 들통난다. 그러나 복한 정보는 다르다. 그 폐쇄성에 따라 일반인은 안보 및 대북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없고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도 쉽지 않다. 따라서 잘못된 뉴스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이를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한 자세는 <표 2>과 같다.

언론의 검증 노력(언론사의 공동출자로 비영리 팩트체크 기관 운영 등)과 함께 다양한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보의 위험성과 가짜뉴스의 구별법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의 유포를 체크하기 위한 자발적인 ‘크로스체크(Crosscheck) 프로젝트’가 출범하여 비영리단체의 주도로 각 언론사에 소속된 1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모여 온라인에 떠도는 루머와 조작된 뉴스들을 검증해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시민의식의 자발적 성숙을 통해 우리 스스로 가짜뉴스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 비판적 독해능력)를 함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²⁴⁾

24) 김창룡,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서울: 이지출판, 2019).

<표 2> 가짜뉴스 분별 자세

- △ 신변이상설 등 자극적인 뉴스는 신중하게 추가 정보를 탐색
- △ 정부의 공식 입장과 분석, 해명 등은 사실에 의거한 것인바 객관적으로 수용
- △ 공신력 있는 기관 정보가 아닌 내부 소식통만을 인용한 뉴스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의심하는 자세
- △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한 사례가 있는 언론사나 개인 인터넷 채널 등의 뉴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필요
- △ 포장은 그럴듯해 보이거나 통상적인 수준에서도 전부 혹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라시는 배경

자료: 필자 작성.

2) 언론의 역할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정부를 독려·견제하면서 시민사회를 건전하게 성숙시키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짜뉴스 사례로 인해 언론의 순기능들이 약화되며 건전하고 상식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이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 간 분단의 현실 아래 북한에 대한 보도 환경은 특수성을 띠고 있다. 남북관계의 현실에 있어 북한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며 사실 확인이 어려워 각종 특종의 유혹 및 오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문제나 대북정책 등은 정치성과 당파성을 가진 주제이며 역대 정부가 언론을 통해 이를 활용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부 언론은 대부분의 언론과는 다르게 정치적 의도 및 이념적 편향성을 토대로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뉴스 및 개인방송이 증가된 것과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보는 북한의 특징인이 이를 상대로 법적 구

<표 3> 가짜뉴스 대응, 언론의 역할

- △ 최소한의 사실 확인 관행
- △ 가짜뉴스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의 공유
- △ 가짜뉴스 미디어의 삼진아웃제
- △ 언론사 간 속도 경쟁 자제 협약
- △ 언론단체 연합 및 시민단체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도입
- △ 무분별한 해외 언론 따라가기 자제

자료: 필자 작성.

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가짜뉴스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구조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 지난 몇 년간 가짜뉴스의 통로로서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한 데 대해서는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이에 통감하고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²⁵⁾ 이를 위해서는 <표 3>와 같은 관행과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3) 정부의 역할

통상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대변인 브리핑이나 보도해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정부기관 포함)는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정

25) “1995년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가 만든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훈, “한반도 흔드는 북한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 그리고 가려보기,” 『한반도평화포럼』, 5월 월례토론회, 2020년 5월 14일.

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가짜뉴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선거를 전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통해 가짜뉴스 작성자·유포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범람하는 온라인 개인 미디어와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대해 현재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구제 방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²⁶⁾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우리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²⁷⁾ 다시 말해서 북한 내 인물의 신변이상설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대북정책 집행에 있어 사실과 다른 오보의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의 법적 절차는 가능하다.²⁸⁾

26) 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27) 일례로, ‘김정은 신변이상설’의 경우 피해의 당사자가 김정은이므로, 김정은만이 명예훼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김정은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겠는가?

28) 앞서 탈북자가 대표로 있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하여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선원들이 선원이 아니라 탈북 알선책이라고 주장할

문제는 북한 정보가 한반도 리스크(Korean risk)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면, 북한 내 이상 징후 → 한반도 긴장 고조 → 해외자금 이탈 → 주가 하락 및 환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작전 세력(불순한 세력)이 존재하며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북한 정보의 폐쇄성, 남북관계의 정치성 등으로 인해 오보 가능성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로서는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적실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의 확대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이 “특이동향이 없다는 데 확신한다”고 답변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본다. 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 관련 정보를 보유한 정부도 정보 제공에는 한계는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특이동향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보 소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제약이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는 한계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확실히 검증된 사안의 경우 오히려 전략적으로 정보자산과 검증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오보 확산시의 부정적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정부로서는 북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실시간 대응을 하는 것이 초동단계부터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2020년 5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새로 만들고

데 대해 정부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 지 한 달 후 동매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사항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였다. 악의적으로 남북관계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나 청와대, 총리실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한편, 남북 방송·신문 등 미디어 분야 교류의 확대도 필요하다. 북한의 미디어 환경이 우리보다는 낙후하지만 가짜정보를 걸러내는 데 있어 북한의 공식적인 확인도 필요하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 미디어 교류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정하고 북측에 제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 ‘남북 미디어 교류협의회(가칭)’ 등을 설립하여 남북 간 미디어 격차 해소, 상호교류,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다.

4) 탈북자·정치인·전문가의 역할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는 북한 정보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탈북자 혹은 탈북자 단체, 그리고 이들과 연결된 내부 소식통이 중요한 북한 관련 정보 제공자일 수 있다. 이들을 둘러싼 정보 장사와 이권 개입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탈북자들의 일탈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열심히 정착하고 있는 건전한 탈북자들이 같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 탈북자 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이미 정보장사에 발을 들인 탈북자들은 또 다른 집단에 의해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국가안보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탈북자 3만 시대에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2020.5.13)을 계기로 탈북자들이 일부 언론이나 정치세력들에 휩쓸리지 않고 건전하고 정확한 북한 정보의 제공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정치인과 전문가는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확산을 막아야 할 주체이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가짜뉴스 옴부즈맨’ 역할을 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개인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부 언론에 편승하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 혹은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 정치인부터 가짜뉴스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법률에서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북한 관련 가짜뉴스 유형은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 로열패밀리 신변이상형, 최고지도자 측근 숙청형, 기타형 등 네 가지이다.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이상형이 가장 파괴력을 지닌다. 가짜뉴스의 유통과정은 생산, 유포, 재생산, 가짜 확인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유통과정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는 언론이다. 특히 재생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행위자는 전문가와 정치인들이다. 남북 관계가 정체되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의 심리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에 대체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도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있어 사망을 바라거나 환호하는 댓글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이 자신들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공식적으로 반응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기인한다. 최고지도자의 관련 사항은 극비이다. 폐쇄국가의 특성상 가짜뉴스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숨겨야 할 정보가 공개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가짜뉴스가 국가안보나 경제, 사회 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그 피해는 무차별적이다. 미국의 CNN이 ‘김정은 위중’을 보도했을 당시 주가는 한때 2.99%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9.2원 급등했다. 가짜뉴스를 분별하기 위해 신변이상설 등 자극적인 뉴스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가짜뉴스 미디어의 삼진 아웃제와 시민단체와 언하이 함께하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도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시간 대응을 하는 것이 초동단계부터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가칭 ‘남북미디어 교류협의회’를 설립하여 남북 간 미디어 격차 해소, 상호교류,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정치 마련이 요구된다. 정치인과 전문가는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확산을 막아야 할 주체이다. ‘가짜뉴스 음부즈맨’ 역할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 혹은 ‘법률안’ 제정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 가짜뉴스의 유통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

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면접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구과제이다.

■ 접수: 6월 25일 / 수정: 8월 10일 / 채택: 8월 11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서울: 늘봄플러스, 2020).

김창룡,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서울: 이지출판, 2019).

매킨타이어, 리(Ledd MacIntyre), 『Post-truth』, 김재경 옮김(서울: 두리반, 2019).

오웰, 조지(George Orwell), 『1984』, 정희성 옮김(서울: 민음사, 2003).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학생운동 1980: 10·28 건대항쟁을 중심으로』(파주: 오월의봄, 2016).

2) 논문

노성종·최지향·민영, “‘가짜뉴스효과’의 조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가짜뉴스효과’의 견인 및 견제 요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4권 4호(2017), 99~149쪽.

3) 신문

『동아일보』, 2019년 5월 27일.

『데일리NK』, 2020년 4월 20일.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19년 12월 17일.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1일.

연합뉴스, 2020년 3월 23일.

『조선일보』, 1986년 11월 17일; 2013년 8월 29일; 2015년 5월 12일; 2017년 11월 6일; 2019년 5월 31일.

『한겨레』, 2020년 5월 4일.

4) 기타

김홍광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q110Qk6jSxlbGW-PAwT6g>

신의환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gOLQwRv1r2m9mhE1tfsn3Q>
한반도평화포럼 5월 월례토론회, 2020년 5월 14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20년 4월 23일.

2. 국외 자료

1) 단행본

重村智計, 『金正日の正体』(東京: 講談社, 2008).

2) 논문

Spohr, D., “Fake new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Filter bubbles and selective exposure on social media,” *Business Information Review*, Vol.34, No.3(2017), pp.150~160.

3) 신문

New York Times, August 17, 1998; May 31, 2019.

3) 기타 자료

CNN, May 11, 2015; April 20, 2020.

North Korea Fake News: Type, Distribution, and Counterplan

Yang, Moo-ji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type and distribution process of fake news related to North Korea, its damage to the nation, and further seeks countermeasures to eliminate fake news. Methodolog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literature including press reports spanning the era of the Kim Jong Un regime since 2012. Fake news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news about 1) health or personal danger of the supreme leader, 2) personal danger to the Kim family, 3) purging of the leader's close aides, and 4) other types. The distribution process of fake news is identified as being carried out in four stages: production, distribution, reproduction, and verificatio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ake news relate to human psychology. Such news also attempts to embed itself into people's minds. If fake news i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economy, or social safety, the damage can be indiscriminate. For example, when CNN reported that Kim Jong Un's condition was

“critical,” stock prices fell to 2.99 percent at one point and the won-dollar exchange rate soared 9.2 won. The media plays a big role in responding to fake news. Hence, the introduction of a ‘strikeout system’ for perpetrators of fake news and monitoring by civic groups, media, and academia should be considered. Politicians and experts should not be the producers of fake news but those who verify and prevent its spread, and South Korea should consider enacting legislation in its 21st National Assembly as a means to eliminate fake news.

Keywords: North Korea, fake news, type, Chosun ilbo, CNN, government, maneuver, role